

“아는 업체에 하도급 쥐” 압력 행사한 공무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입건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무면허인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 업체가 조경 면허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태백시청 공무원 이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사비의 7%를 주기로 하고 타업

체의 조경 면허를 빌려 하도급을 받은 업체 대표 김모(47)씨와 조경 면허를 빌려준 업체 대표 장모(57)씨 등 2명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4월에 시행한 공원조성 공사의 원청 업체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아하! 그렇구나

영업정지 처분과 경미한 건설공사 수행

Q A건설회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X로부터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B도지사로부터 건설업등록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A건설회사는 위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B도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건설회사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A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8호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할 경우에 건설업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경미한 건설공사는 수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위와 관련하여 “건설업등록제도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규정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예외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건설업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경미한 건설공사도 여전히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나 대상에 속한다면서 영업정지 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참조).

이 사안의 경우 A건설회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비록 경미한 공사라도 수행하지 못함에도 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B도지사의 건설업등록말소는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발주처, 低價예산에 물량내역 끼워맞추기 급급

건설공사 현장 '표준시방서' 실종

〈안전·품질 확보 등 위한 최소 시공 기준〉

전문공사 현장의 자재·노무 등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기준보다 부족하게 투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원인으로 발주처가 시공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저가 예산에 물량내역을 끼워 맞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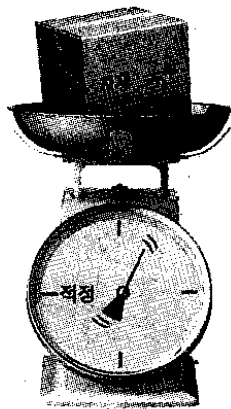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발주처가 작성하는 물량내역서에 포함된 일부 전문공종의 자재·노무 사용기준이 표준시방서 기준과 달라 부실공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란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확보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공현장에 적용되는 '최소 기준'이다.

철근콘크리트 공종의 경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지지대로 사용되는 3.5m 이상 동바리는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시방서에서 1.5m마다 수평 연결재를 추가로 1단씩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표준시방서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발주처가 작성한 물량 내역서에 '추가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남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김홍남 대표는 "철근 사이의 공간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철근스페이서의 경우도 표준시방서는 1.3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면 2m 또는 3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전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철콘업체 관계자는 "철근 콘크리트

현실 동떨어진 자재·노무비 '기준미달' 시공 불가피 안전 위협·부실시공 우려



공종의 경우 표준시방서대로 지켜지는 현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로 업계 관계자들은 발주처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 절감을 고려한 물량내역서를 작성해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내역입찰' 방식으로 공사가 발주되는 경우, 발주처가 자재·노무 사용 기준을 적시한 물량내역서를 직접 또는 설계용역을 통해 작성한다. 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업체들에 이 내역서를 공시한다.

문제는 발주처가 미리 책정된 저가 예산에 맞춰 내역서를 작성하다 보니 표준시방서 기준에 미달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창복 건설상생발전위원회 위원은 "자재비에는 '자재정리비', 자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잡자재비', 다 쓴 자재를 치우기 위한 '자재 청소비'가 들어가지만, 발주처에서는 설치해체비로 단순화시킨다"며 "자재비가 세분화되지 않아 공사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무비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건설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세월호 사태 이후 현장 안전감독이 강화되면서 안전보호구 착용과 공사 전 안전교육 등에 들어가는 시간이 대폭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공사기간도 연장될 수밖에 없고 노무비도 상승한다. 하지만 이 같은 현장사정이 내역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 발주처에서 현장을 잘 모르다 보니 공사 원가 자체가 낮아진다"면서 "표준시방서 기준과 다르게 자재비나 노무비가 적게 계상되고 업체들은 그 금액 그대로 공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체 종사자는 "공사 내용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예산에 공사를 끼워 맞추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윤석기자 ysys@